

도민이 행복한 청렴전남 실현을 위한

전라남도 청렴활동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전라남도
JeollaNamdo

목 차

I. 워크숍 개요	3
II. 청렴활동 리더 운영 및 활동요령	7
III. 2019년 청렴도 향상 추진방안	31
IV. 부패·공익신고&청탁금지법 이해	47

I

워크숍 개요

「전라남도 청렴활동 리더」 역량강화 워크숍

지역사회 청렴활동 리더들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요령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1 기본방향

- ‘청렴전남’ 실현을 위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청렴활동 리더의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 청렴활동 리더의 활동요령, 청렴 관계법 연찬 등을 통하여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제시

2 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 : 2019. 3. 28.(목) 14:30 / 전남복지재단 대회의실
- 참석대상 : 80명(청렴활동 리더 49,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31)
- 주요내용 : 활동요령 설명, 부패·공익신고&청탁금지법 이해 강의 등

3 세부일정

구 분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부터~까지	소요		
개회식	14:10~14:30	20'	등 록	사회자 " 감사관
	14:30~14:32	02'	개 회	
	14:32~14:35	03'	국민의례	
	14:35~14:40	05'	인사말씀	
역량강화 교육	14:40~15:00	20'	청렴활동 리더 운영 및 활동요령	청렴윤리팀장
	15:00~15:20	20'	2019년 청렴도 향상 추진방안	청렴지원관
	15:20~16:20	60'	부패·공익신고&청탁금지법 이해	전문강사
	16:20~16:40	20'	자유토론(질의응답 포함)	청렴활동 리더
	16:40~16:45	5'	기념촬영	
	16:45		폐 회	



청렴활동 리더 운영 및 활동요령

전라남도 감사관실
청렴윤리팀장 정애숙

「전라남도 청렴활동 리더」 운영

청렴하고 의로운 도민을 전라남도 청렴활동 리더로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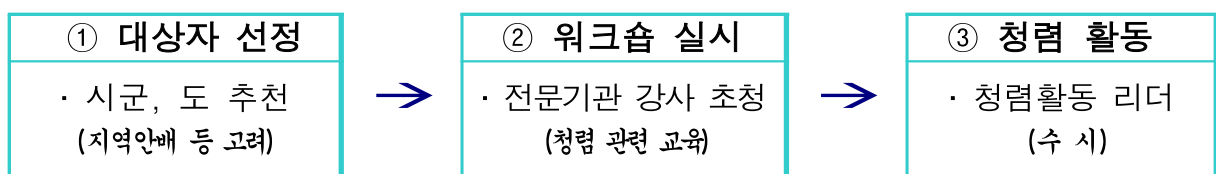
1 추진개요

□ 추진방침

-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중에서 젊고 활동적인 사람 선정 운영
-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 효과 극대화
- 지역사회 전체로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역별로 적정인원 안배

□ 운영계획

- 운영시기 : 2019. 상반기 ~
- 인 원 : 49명(도민감사관 중 선정)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도민감사관 임기만료시 해촉
- 추진절차



- 주요내용 : 지역사회 내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실천 운동 전개

□ 주요역할

-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활동 추진
 - 청렴 실천과제 추진, 주민 대상 청렴 홍보·교육, 도, 시군 청렴활동 공동 참여 등
- 공공부문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한 부패 감시 및 제보
 - 부패공익 신고,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부정부패 제보 등
- 청렴 정책 모니터링 및 반부패 제도개선 건의 등

2 대상자 선정 및 워크숍

□ 대상자 선정

- 시 기 : 2019. 2.
- 선정인원 : 49명(시 3명, 군 2명)
- 선정방법 : 도민감사관 중 시·군 및 도 추천
 - 도민감사관 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활동한 경험이 있는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
 - 지역사회에서 젊고 활동적인 자

〈 청렴활동 리더 현황 〉

- ▶ 성 별 : 남 32명(65%), 여성 17명(35%)
- ▶ 연 령 별 : 30대 1명, 40대 5명, 50대 22명, 60대 21명
- ▶ 직 업 별 : 기업인 5, 자영업 17, 농어업인 15, 회사원 4, 주부 등 기타 8

□ 워크숍 실시

- 일시/장소 : 2019. 3. 28.(목) 14:30 / 전남복지재단 대회의실(4층)
 - 참석대상 : 80명(청렴활동 리더 49, 도 및 시·군 감사공무원 31)
 - 강 사 : 전문강사 초청 등
 - 주요내용 : 활동요령 설명, 공약부패신고&청탁금지법 이해 강의 등
- ※ 청렴활동 리더 우수사례 발표 : 하반기 워크숍

3 청렴활동

□ 활동개요

- 기 간 : 연 중(수시)
- 장 소 : 청렴활동 리더 주소지 관내
- 내 용 : 청렴 홍보교육, 부패 감시 및 제보, 반부패 제도개선 건의 등

□ 주요임무 및 활동

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실천 활동

○ 지역사회 활동분야에서 청렴 실천과제 발굴 추진

- 청렴교육 강화, 부당한 업무지시 개선, 선물 안주고 안받기 등(직장)
- 투명 사회 시민참여 헌장 제정, 부패감시와 투명성 제고 활동 등(시민사회단체)

○ 주민 대상 청렴 홍보·교육(청렴시책,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 등)

- 직장, 사회단체, 모임, 반상회 등을 통해 청렴 관계법·제도 홍보
- 지역사회 청렴교육을 통해 반부패 관련 인식개선 활동 추진

※ 활동지원(도, 시·군)

- 청렴동향, 2019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제공
- 청렴도 평가 바로알기, 청렴웹툰, 부패·공익신고 등 청렴 홍보자료 발송
-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등 청렴 관련 법령 발송
- 전라남도 및 시·군 주관 청렴관련 연찬회, 워크숍 참여 지원 등

○ 도, 시·군 청렴활동 시 공동 참여

- (도 행사) 제5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등

♣ 제5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 기 간 : 2019. 6. 10. ~ 6. 14.(5일간)
- 장 소 : 전남도청, 빛가람 혁신도시, 광주일원
- 참 여 : 도·시민, 한전 등 26개 기관 임직원
- 행 사 : 개막행사, 청렴특강, 청렴영화, 청렴 캠페인 등

- (시·군 행사) 청렴 교육, 청렴실천 캠페인 등

② 공공부문과의 협력과 참여를 통한 부패 감시 및 제보

○ 제보 대상

-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부정부패

○ 제보 방법

-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전라남도 홈페이지) 등 활용
☞ (전라남도) 제보사항은 신속 조사하고, 그 결과를 30일 내 통보

③ 청렴 정책 모니터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건의

○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 자문

- 2019년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 시·군 청렴도 향상대책 등

○ 부패방지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필요한 사항 건의

- 사회복지 등 각 행정 분야별 반부패 제도 발굴 및 개선 건의

♣ 도민감사관 주요임무

- 전라남도민의 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
- 사건, 사고 등 지역동향 제보
-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제시
- 그 밖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 활동상황 보고

○ 보고시기 : 분기별

○ 보고체계 : 청렴활동 리더 → 시·군 담당자 → 도 담당자

○ 사후관리 : 청렴활동 리더 활동사항 파악 및 활성화 방안 강구, 활동실적이 저조한 자는 재선정 배제

□ 도민감사관 활동사례

○ 불법 무허가 영업

- (제보) 불법건축물(컨테이너)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불법 무허가 영업방조
- (조치)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에 고발

○ 군유지내 불법 건축물

- (제보) ○○군 군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처리하지 않음
- (조치) 변상금 부과 관련 업무팀장과 담당자 문책

○ 마을공동 주차장 부실시공

- (제보) 마을공동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였는데, 콘크리트 포장 부분이 벗겨져 철근이 보이고 있음
- (조치) 부실시공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도 ○○시가 12,860 천 원의 예산을 부담하여 처리함. 관련업무 팀장 문책

○ 공무원 직무관련 정보 부동산 투기

- (제보) 공무원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촉진 지구내 토지 매입
- (조치) 민원인이 수차례 잔여 토지 매입 요청에 따라 순수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입

4 향후 추진계획

○ 청렴활동 리더 지역별 청렴활동 추진 : 연중(수시)

○ 청렴활동 리더 활동실적 파악 분기별 제출(시군 감사부서)

○ 활동실적 우수 청렴활동 리더 표창 : 연말

[제보 및 건의서식]

청렴활동 리더 제보 및 건의서

제 목	
제보 및 건의 내 용	
첨 부	
위와 같이 제보 및 건의하오니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라남도 청렴활동 리더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활동실적 보고서 서식]

청렴활동 리더 활동실적 보고서(/ 분기)

(○ ○ 군)

(청렴활동 리더 홍길동)

분 야	활동실적 내용
청렴실천 활동	
부패 감시 및 제보	
부패방지 제도개선 건의 등	



당신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밝힙니다.



공익신고 안내

감사관실 청렴윤리팀장 정애숙

청 렬



아무도 알아 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부정청탁 금지

도민과 함께 청렴전남 실현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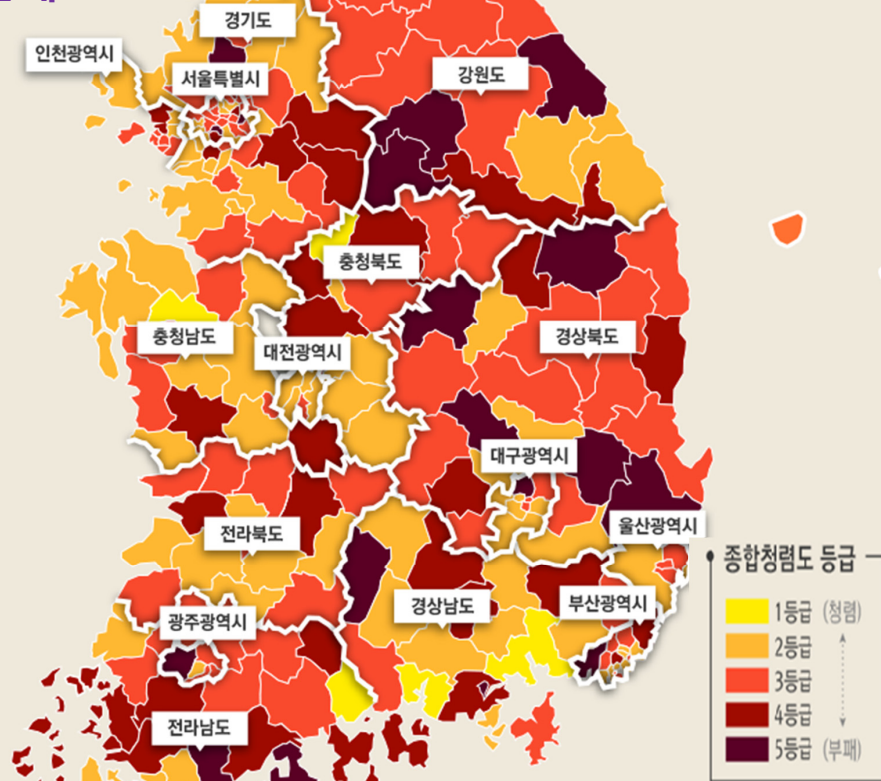


- 2018 공공기관 청렴지도
- 나는 공익신고자입니다
- 공익신고 안내
- 위반 행위 신고방법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 보상 포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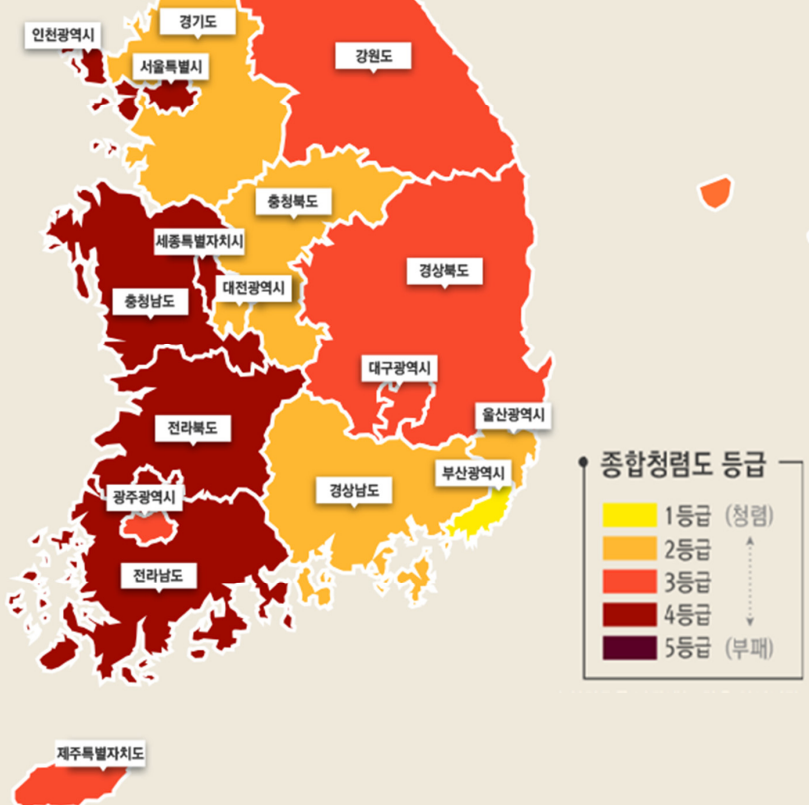
2018 공공기관 청렴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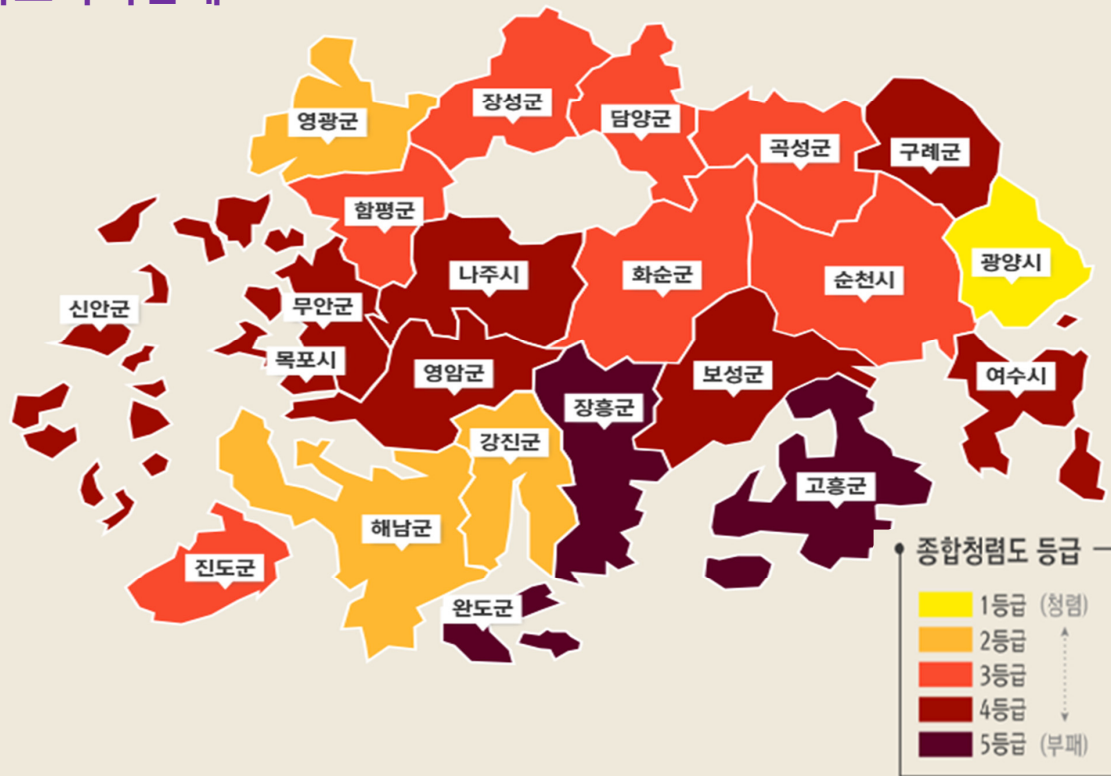
전국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나는 공익신고자입니다.

공익신고 안내

공익침해행위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 ※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 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등



공익신고

-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전남도청 등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위반행위 신고방법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 우편신청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감사관실

☞ 팩스신청 : 044-200-7972(권익위), **061-286-4724(전남도청)**

☞ 직접 방문 신청

☞ 국가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

공익신고코너

신청양식

인터넷에서 하는 절차(전남도청 홈페이지)

☞ 전남도청홈페이지 → 참여와소통 → 청렴전남 → 도민감사관 → 제보및건의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Jeollanam-do.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Participation and Communication', 'Policy', 'Information', 'Electronic Services', 'Regional Information', 'Introduction to Jeollanam-do', and 'Jeollanam-do Menu'. The main content area features a large banner for the 'Jeollanam-do Spring Flower Festival' with a schedule of events.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veral sections: 'Public Information' (공지사항), 'Public Information' (보도자료), 'Public Information' (고시/공고), 'Public Information' (주요포커스), 'Public Information' (차주 찾는 서비스), 'Public Information' (2019년 모범 납세자 명단), and 'Public Information' (전라남도 모바일 앱). The right sidebar contains a 'Jeollanam-do Mobile App' section with QR codes for Android and iOS, and a 'Jeollanam-do Mobile App' section with QR codes for Android and iOS.

인터넷에서 하는 절차(전남도청 홈페이지)

전남도청홈페이지 → 참여와소통 → 청렴전남 → 도민감사관 → 제보및건의

사이트맵 로그인 회원가입 전남새물결 전남남도의회 2019.3.25. 기상정보 대기환경정보 + 웹서비스바로가기

전라남도 JeollaNampo 국가상징 알아보기 단가 공공무형 통합검색 통합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참여와 소통 도정소식 정보공개 전자민원 분야별 정보 전남소개 전체메뉴보기

참여와 소통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창의를 도정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도민의소리 우리 동네 숨은 선명방 자유발언대 도민 홍보방 홈페이지 모니터 유해정보신고	도민접견실예약 예약하기 예약확인	도민제안-참여 도민제안 설문조사 정책연구용역 전남정책자문위원회 국민디자인단	정책참여 전자공청회 이용안내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청렴전남 청렴신문고 부정부패 신고 감사결과 공개 사전 컨설팅 감사 청렴사책·농방 청탁금지법 이해 도민감사관 자료실	좋은경관 만들기 좋은경관 만들기 경관아이디어방 국내외 우수사례 경관개산사례 시군 소식방	소통 소셜허브 모바일 앱	행정심판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행정심판	항우소식 항우회소식 항우 동경
---	--------------------------------	---	--	--	--	----------------------------	-----------------------------------	-------------------------------

도민접견실예약 >
 도민제안-참여 >
 정책참여 >
 청렴전남 >
 좋은경관 만들기 >
 소통 >
 행정심판 >
 항우소식 >

이곳은 인정이 넘치고 훈훈한 지역민들끼리 위한 선물을 알리고 격려하는 메뉴로서 욕설, 비방, 종교, 상업적 게시물 등 목적 외 게시글은 사전 경고 없이 삭제됩니다.
 이곳에 등록된 글은 민원 처리되지 않으며, 민원에 대한 문의,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전자민원' > 민원상담 신청하기,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하는 절차(전남도청 홈페이지)

전남도청홈페이지 → 참여와소통 → 청렴전남 → 도민감사관 → 제보및건의

사이트맵 로그인 회원가입 전남새물결 전남남도의회 2019.3.25. 기상정보 대기환경정보 + 웹서비스바로가기

전라남도 JeollaNampo 국가상징 알아보기 단가 공공무형 통합검색 통합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참여와 소통 도정소식 정보공개 전자민원 분야별 정보 전남소개 전체메뉴보기

참여와 소통

열린혁신도시사실 >
 도민의소리 >
 도민접견실예약 >
 도민제안-참여 >
 정책참여 >
청렴전남 >
 청렴신문고
 부정부패 신고 >
 감사결과 공개
 사전 컨설팅 감사
 청렴사책·농방
 청탁금지법 이해
 도민감사관
 자료실
 좋은경관 만들기 >
 소통 >
 행정심판 >
 항우소식 >

부정부패 신고 (인쇄하기) (SNS파가기)

HOME > 참여와 소통 > 청렴전남 > 부정부패 신고

공무원부조리 신고	공무원행동강령 신고	적극행정 면책신고상당
복지부정신고	공익신고	청렴신문고
공직선거관리 위반신고		

공무원부조리신고
 전라남도에서는 부패고리 단절을 위해 공직자 비리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신고
 도민 누구나 공무원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전라남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신고상당
 기업 인허가 업무 등 담당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시행중으로 면책관련 신고 및 상당을 받습니다.

복지부정신고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 관련 신고를 받습니다.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전라남도 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하는 절차(전남도청 홈페이지)

전남도청홈페이지 → 참여와소통 → 청렴전남 → 도민감사관 → 제보및건의

사이트맵 로그인 회원가입 전남새롬 전남남도의회 2019.3.25. 기상정보 대기환경정보 + 웹서비스자료 ENGLISH 中語 日本語

전라남도 JeollaNamdo 국가상징 알아보기 인기 3공무원 통합검색 통합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인터넷방송 전남TV 남도여행

참여와 소통 | **도정소식** | **정보공개** | **전자민원** | **분야별 정보** | **전남소개** | 전체메뉴보기

참여와 소통

- 열린혁신도지사실 >
- 도민의소리 >
- 도민접견실예약 >
- 도민제안-참여 >
- 정책참여 >
- 청렴 전남** >
- 청렴신문고
- 부정부패 신고
- 감사결과 공개
- 사전 컨설팅 감사
- 청렴사례 나눔방
- 도민감사관 >
- 자료실
- 좋은경관 만들기 >
- 소통 >
- 행정심판 >
- 항우소식 >

제도 안내

HOME > 참여와 소통 > 청렴 전남 > 도민감사관 > 제도 안내

제도 안내 | 운영현황 | 운영조례

제도 및 건의

도민감사관 운영 목적

- 감사에 대한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지방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 구원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민감사관의 임무(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제3조)

- 전라남도민의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
- 사건, 사고 등 지역동향 제보
-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
- 전라남도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
- 지역원안 사업 등의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제시
- 그 밖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책무(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제11조)

- 도민감사관 등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3조에서 정한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도민감사관 등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민감사관 등은 감사활동 참여 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활동방법

인터넷에서 하는 절차(전남도청 홈페이지)

전남도청홈페이지 → 참여와소통 → 청렴전남 → 도민감사관 → 제보및건의

사이트맵 로그인 회원가입 전남새롬 전남남도의회 2019.3.25. 기상정보 대기환경정보 + 웹서비스자료 ENGLISH 中語 日本語

전라남도 JeollaNamdo 국가상징 알아보기 인기 3공무원 통합검색 통합검색어를 입력하세요! 인터넷방송 전남TV 남도여행

참여와 소통 | **도정소식** | **정보공개** | **전자민원** | **분야별 정보** | **전남소개** | 전체메뉴보기

참여와 소통

- 열린혁신도지사실 >
- 도민의소리 >
- 도민접견실예약 >
- 도민제안-참여 >
- 정책참여 >
- 청렴 전남** >
- 청렴신문고
- 부정부패 신고
- 감사결과 공개
- 사전 컨설팅 감사
- 청렴사례 나눔방
- 청탁금지법 이해
- 도민감사관** >
- 자료실

제보 및 건의

HOME > 참여와 소통 > 청렴 전남 > 도민감사관 > 제보 및 건의

제도 안내 | **운영현황** | **운영조례**

제보 및 건의

- 제보 및 건의 게시판은 작성자 본인 외에 타인은 게시물을 열람 할수 없으며,
- 게시물의 열람 · 수정 · 삭제는 로그인인 필요합니다.
- 제보 및 건의 게시판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제보, 건의할 수 있습니다.
- 게시글 작성 시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 및 건의 서식 다운로드**

제목 검색어 입력 검색

전체게시물(5) / 전체페이지(1) 로그인

청렴해피콜을 이용하는 방법

- 행정부지사 : 010-6751-4010
- 감 사 관 : 010-6816-4010
- 건설도시국장 : 010-2594-2010
- 청렴지원관 : 010-7359-2010
- 기 타(감사관실 공직조사팀) : 286-2370~2376



신고자 보호 제도

비밀보장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

동의 없이 공개하면
형사처벌

불이익조치 금지

해고, 전보, 감봉 등
금지

불이익 조치하면
형사처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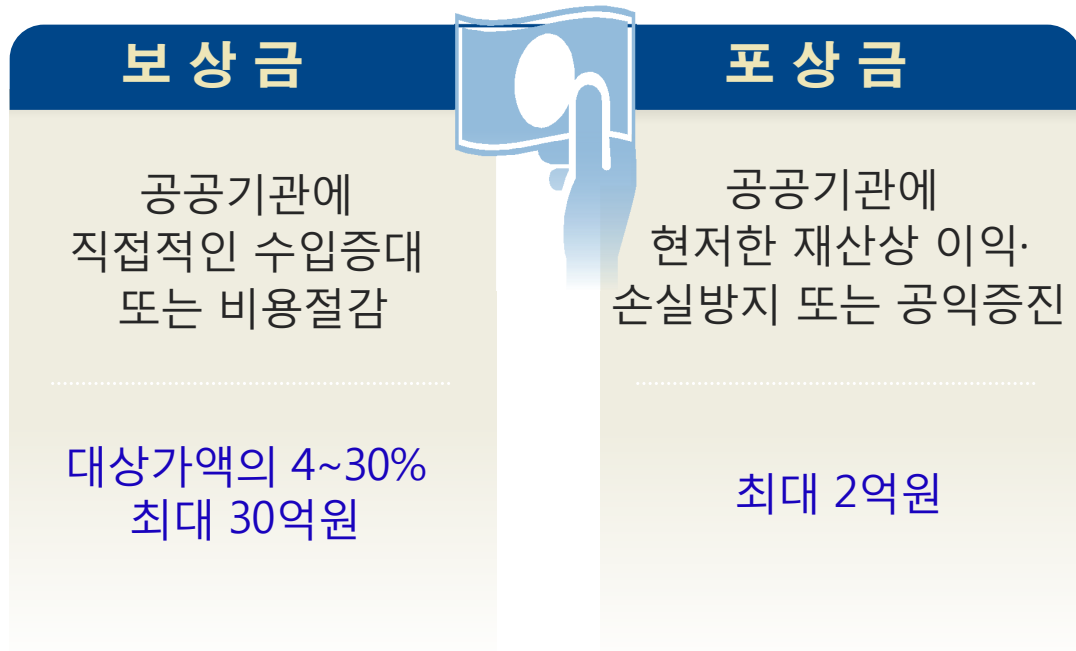
책임감면

형벌, 과태료,
징계 등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손해배상
청구 금지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구조금 신청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① 육체적·정신적 치료 비용
- ②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③ 원상회복 관련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④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⑤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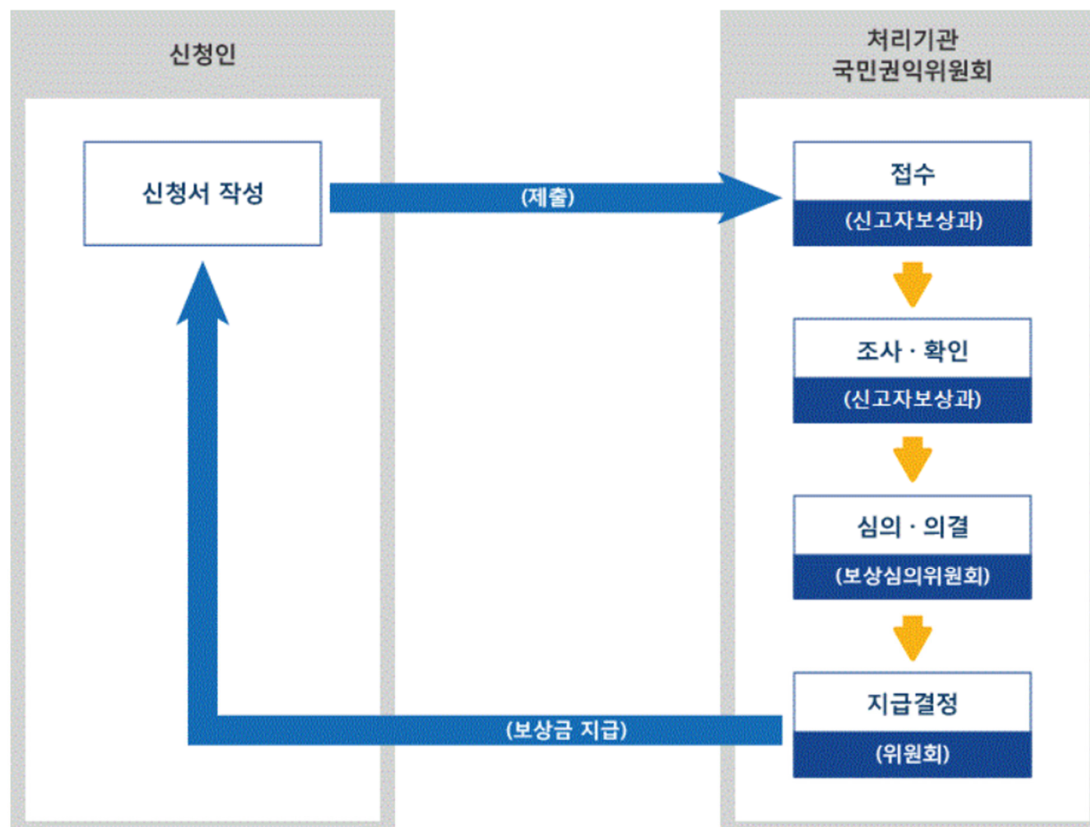


보상금 신청

-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지급

- 벌칙 또는 통고처분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 과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익 반환 등의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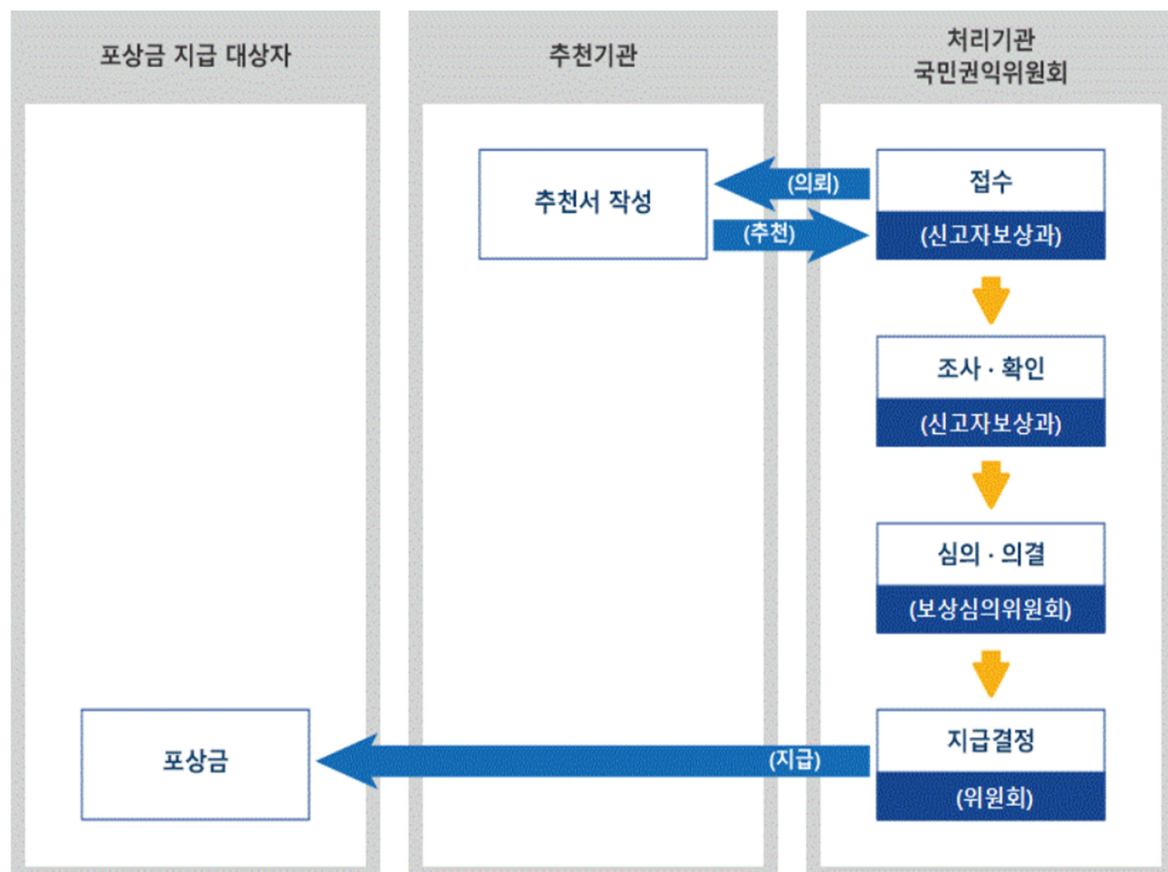
보상대상금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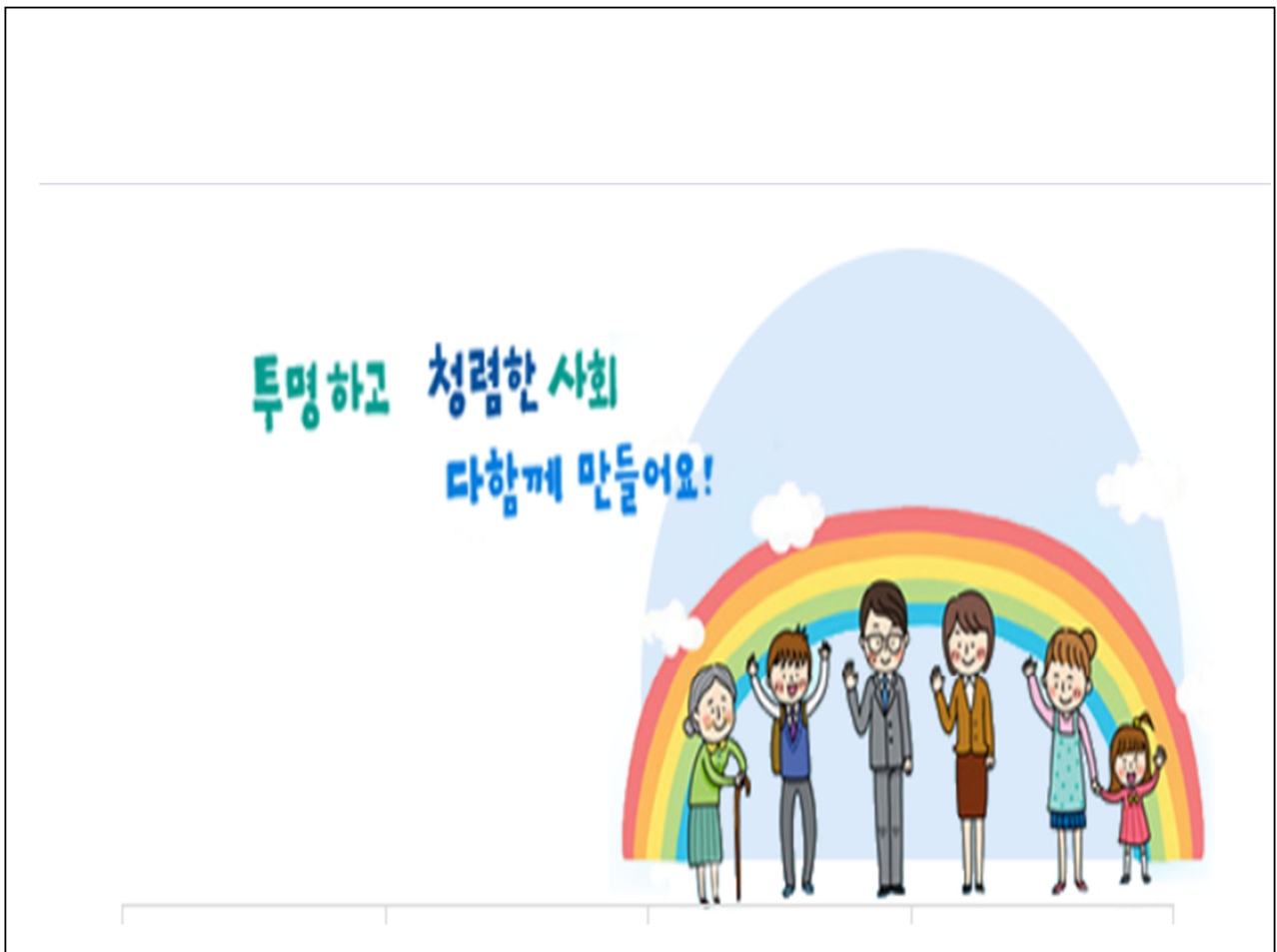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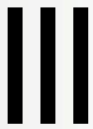
포상금 지급 처리 절차(위원회)

📌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①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②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③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④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⑤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2019년 청렴도 향상 추진방안

전라남도 감사관실
청렴지원관 이형만

'청림전남 회복 원년'을 위한 청림도 향상 추진방안

전라남도 청림지원관 이형만



청림은 경쟁력입니다



목 차

1. 우리나라 부패지수 및 인식
2. 전남의 청림도 현 주소
3. 청림도 평가란?
4. 2019년 청림도 향상 추진방안





CHAPTER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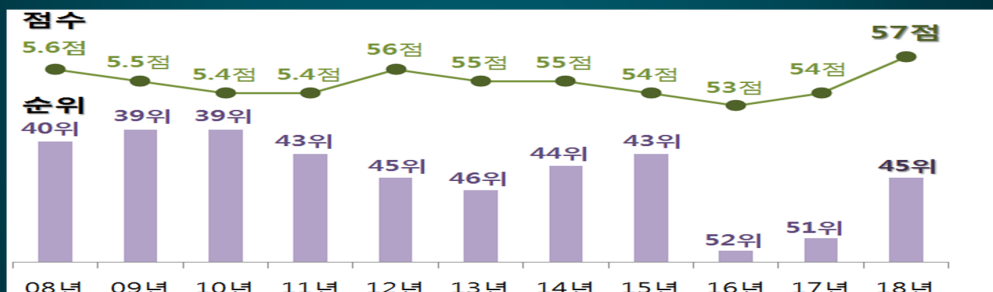
- 우리나라 부패지수 및 인식 -



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2018)

□ 2018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 100점 만점에 57점, 180개국 중 **45위**
- 전년대비 평가 점수는 3점 상승, 순위는 **6단계 상승**



※ 부패인식지수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매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발표





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2018)

순위	국 가 명	점수	순위	국 가 명	점수
1	덴 마 크	88	1		
2	뉴질랜드	87	18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일본	73
3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85	21	프 랑 스	72
7	노르웨이	84	22	미 국	71
8	네델란드	82	1		
9	캐나다, 룩셈부르크	81	45	대한민국	57
11	독일, 영국	80	53	이탈리아	52
13	오스트리아, 홍콩, 아이슬란드	76	180	소말리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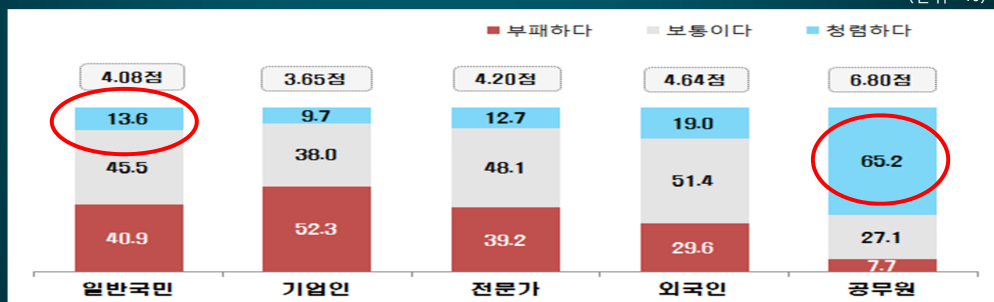
나. 부패인식도 조사(2018)

□ 공직사회 부패수준은 대상별로 큰 폭의 인식 차이가 존재

- 공무원의 경우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비율(65.2%)
- 일반국민의 경우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응답한 비율(13.6%)

[공직사회 부패 수준 인식(2018)]

(단위 : %)



※ 부패인식도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외국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인식을 조사하여 발표





나. 부패인식도 조사(2018)

□ '공무원이 부패하다'라고 생각한 이유

- 일반국민 등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보도에 기초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 공무원은 '직접적인 경험에 기초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음

[공직사회 부패평가 이유(2018)]

(단위 : %)



CHAPTER 2.

- 전남의 청렴도 현 주소 -



가. 전남 지자체 청렴도 결과(2016~2018)

□ 최근 3년간 1등급을 1번이라도 경험한 지자체는 '18년 광양시가 유일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2등급 이상을 유지한 지자체는 2개에 불과
※ 강진군('16~'18 연속 2등급), 영광군('16~'18 연속 2등급)

□ 최근 3년간 연속하여 4등급 이하인 지자체는 5개

- 전남도, 목포시, 고흥군, 장흥군, 완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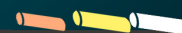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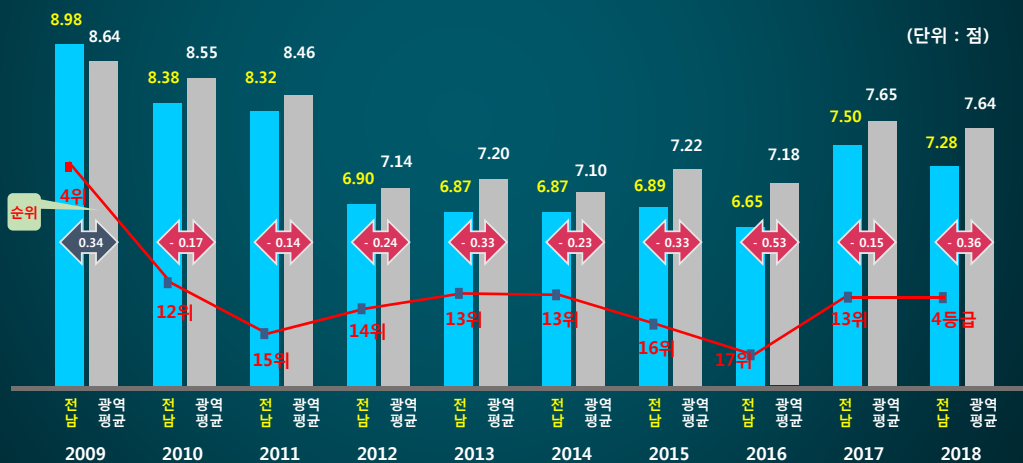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4등급 이하인 지자체는 6개

- 전남도, 목포시, 고흥군, 장흥군, 완도군, 보성군



나. 지난 10년간 우리 도 청렴도 평가 현황

지난 10년간 우리 도의 청렴도는,
2009년 4위를 기점으로, 10위권 이하 하위권에서 정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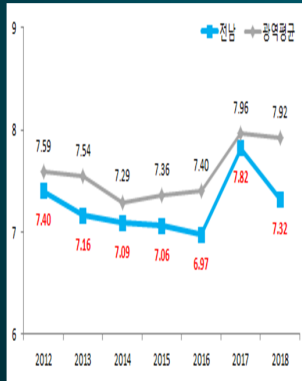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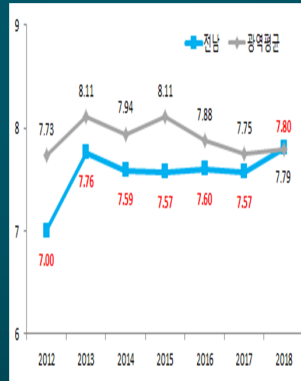
나. 지난 10년간 우리 도 청렴도 평가 현황

청렴도 하락의 주요원인은, '09년 이후 계속해서 광역지자체 평균 이하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외부청렴도**에 있음

[외부청렴도('12~'18)]



[내부청렴도('1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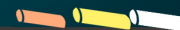


[정책고객평가('12~'18)]



CHAPTER 3.

- 청렴도 평가란? -





가. 근거 및 대상기관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27조의2

-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함
- ② 위원회는 제1항 평가지표를 활용, 공공기관 부패에 관하여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

□ 측정대상 기관 : 612개 기관(2018)

중앙행정 기관(44개)		지자체 (243개)		교육청 (90개)		공직유관단체 (235개)							계
I 유형	II 유형	광역시	기초	시도 교육청	교육 자원청	I 유형	II 유형	III 유형	IV 유형	V 유형	연구원	지방 공기업등	
23	21	17	226	17	73	21	37	37	45	23	24	48	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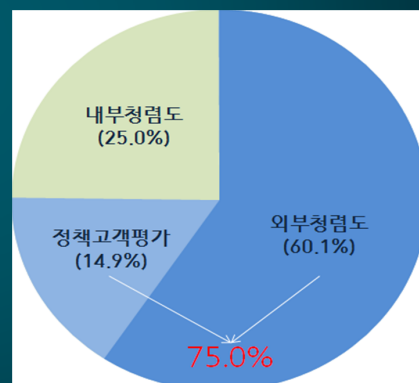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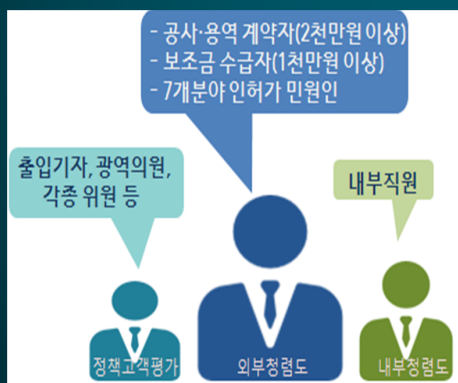
※ 기관 규모에 따라 유형이 나뉨



나. 대상기간, 대상자 및 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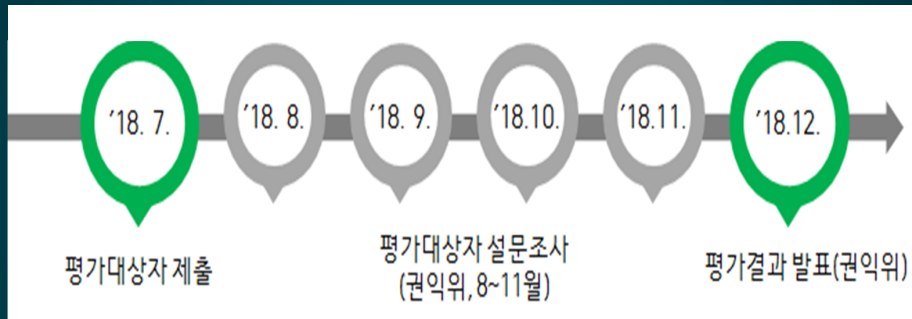
□ 대상기간 : '18. 7. 1. ~ '19. 6. 30.

□ 평가 대상자 및 배점





다. 평가일정



라. 평가 설문지 예시(정책고객평가)

문) 00(기관명)의 구성원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연·학연·혈연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별로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00(기관명)이/가 주요 정책이나 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00(기관명) 공무원(직원)들이 지난 1년간 다른 직원 또는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를 받은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습니까? 단,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세요.

- ① 있다 ②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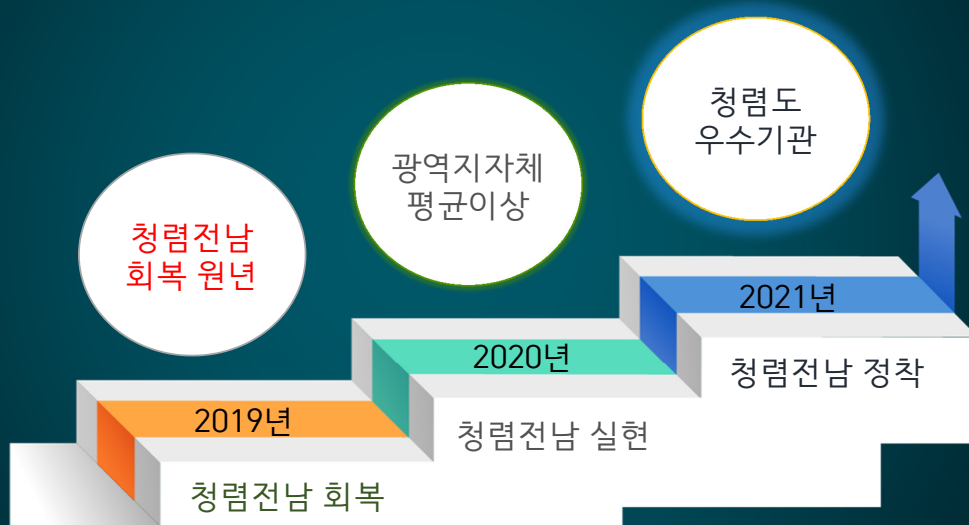


CHAPTER 4.

- 2019년 청렴도 향상 추진방안 -



가. 2019년 청렴도 향상대책 중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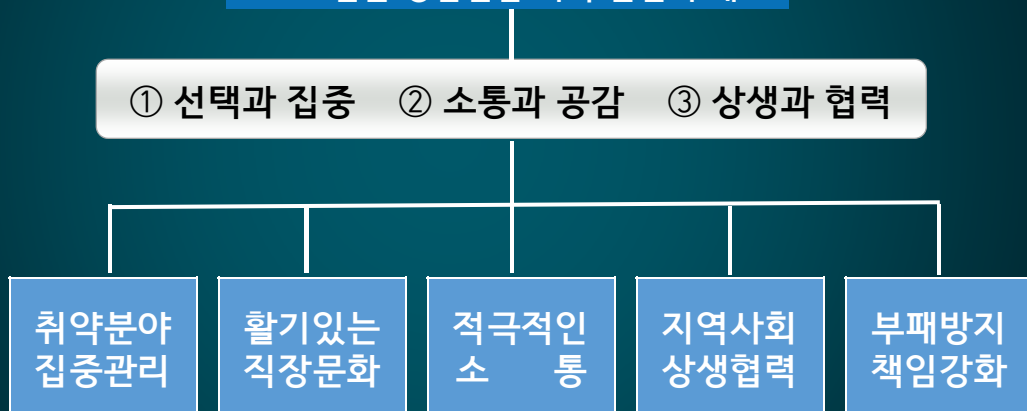
가. 2019년 청림도 향상대책 중점 방향



나. 2019년 청림도 향상 추진계획 : 5개분야 34개 과제

도민이 행복한 청림전남 실현

- '19년은 청림전남 회복 원년의 해 -





다. 외부청렴도 향상 주요 방안

① '청렴지킴이' 안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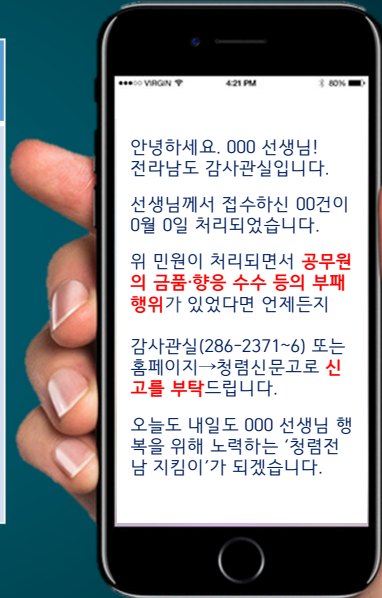
○ 공사·용역·보조금 분야

- 민원완료 후 3일 이내

○ 7대* 인·허가 분야

- 민원완료 후 7일 이내

- * ① 비영리단체 등록 및 관리
② 건설공사 품질시험 ③ 배출시설 허가
④ 공유재산 관리 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⑥ 소방업무(위험물시설 설치허가 등)
⑦ 농수축산물 가공·유통 판매업등록 등



다. 외부청렴도 향상 주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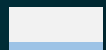
② '모바일 민원만족도 조사' 실시

○ 공사·용역·보조금·7대 인·허가 분야



③ '청렴해피콜'

○ 공사·용역·보조금·7대 인·허가 민원인 대상 감사관실에서 직접 불편사항 유선 확인





다. 외부청렴도 향상 주요 방안

④ '찾아가는 건설현장 청렴컨설팅'

- 진행 중인 외부청렴 관련 공사 및 용역 현장
(감사관실 직원들이 직접 현장방문)



⑤ 외부평가 고객 행사 시 '청렴교육'

- 부서별 대규모 외부평가 고객 대상 행사 시
감사관실과 함께 청렴교육
- ※ 방재 및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교육(800명),
도시계획 연찬회(250명), 명예기자 간담회(120명),
민원메신저(100명) 등



라. 내부청렴도 향상 주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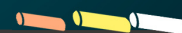
① 익명게시판 '행복토론방' 활성화

- 조직 내부문제는 내부에서 해결방안 고민,
익명이 보장되는 논의의 창구 마련
- 소통방(익명게시), 공감방(우수사례 공유)



② '즐거운 직장 만들기'('18.12월)' 활성화

- 효율적인 업무처리, 회의 및 행사운영 내실화
- 초과근무 감축, 휴가문화 조성, 유연근무 활성화
- 수평적 조직문화, 자기계발 확대 등





라. 내부청렴도 향상 주요 방안

③ 조직내 불합리한 관행문화 개선

- 예산집행의 불합리한 문화 근절(업무추진비 등)
- 소소한 향응·접대·수수 관행에 대한 과감한 단절
- 부당한 업무지시 개선



④ '소통하는 인사' 및 맞춤형 청렴교육

- 온·오프라인 인사상담,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 청렴특강, 간부 및 신규 공무원 청렴교육 등



마. 정책고객평가 향상 주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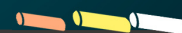
① 청렴파트너와의 '청렴정담회' 운영

- 청렴 유관기관(국민권익위, 지역공공기관, 언론), 노조, 외부전문가 등과의 소통, 자문, 공동행사
→ 청렴 유대감 강화



② 도 민간위원 등에게 도정소식 제공

- 부서별 민간위원들에게 도정소식 제공 및 의견청취
→ 도정의 투명성과 환류를 강화
- 도 근무(경험) 전출자·퇴직자 등에게 인사, 경조사 등 제공
→ 유대감 증진 및 자긍심 고취





바. 지역사회와의 청렴 상생협력 방안

① 22개 시·군과의 상생협력

- 청렴도 향상방안 합동 토론회 및 공동 청렴행사
- 시·군 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지원



② 민관 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운동 강화

-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는 '청렴활동 리더'를 선발하여 청렴활동
- 빛가람 청렴문화제 및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여



사. 부패방지를 위한 책임강화 방안

□ 4급 이상 '청렴역량 진단' 및 부서별 청렴평가 실시('19. 상반기)

□ 시·군 및 출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 평가

- 부패행위 발생분야 '특별감사' 등 실시
 - 청렴도 평가 취약분야(부서)는 '특별감사'
 - 부패행위 적발·신고·노출 분야(부서)는 '공직감찰'
 - 부패행위자 업무와 관련 있는 상급자에게도 불이익 조치

□ 비위행위 인지 즉시 강력한 인사 조치

□ 부패 유발업체 퇴출

IV

부패·공익신고&청탁금지법 이해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사무총장 신영용

부패.공익신고& 청탁금지법이해



신영용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부패신고 제도 이해 및 활성화 방안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신고 사건이란?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이해

1. 부패행위 신고 필요성
2. 내부신고 의의
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필요성

부패행위 이해 및 신고·처리 절차

1. 부패행위 이해
2. 부패행위 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보호·보상제도 이해

1.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2. 부패신고자 보상·포상제도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제도 비교

- 주요 부패사건 사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신고사건이란?



부패
행위



공익침해
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행위

1. 공직자가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2.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이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1.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2. 불량식품 제조·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유사 식유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담합 행위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관련된 279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

1.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을 위반한 행위
2. 직무 관련 금품수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공용물의 사적 이용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1. 연구개발비 R&D 및 출연금
 - 연구과제와 무관한 원부자재 구입
 - 연구원 하위 등제 인건비 임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 사적용도 사용, 하위장구, 비용 부풀리기, 증빙 위조 등
2. 복지사업 보조금
 - 사회복지 시설·단체, 장애인·아동 등에게 무자격자 채용, 하위서류 작성 등
 - 사회복지 기업, 사후 조적, 7종 근로자 신분 채용 중단, 목적외 사용 등
 - 요양 급여 등 비요양인 고용, 의사면허자 개업(사무장병원, 하위서류 등 부당수급)
 - 기타 어린이집 등 자립도, 실업급여 기초생활급여 등 부당수급
3.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 보조금 선정 단계 절차 미흡, 유사·중복 사업 선정
 - 목적외 사용, 사업비 부풀리기, 세급개산서 위변조 등
 - 보조금 정산 지연, 보조금시설 무단파괴 등



Chapter.1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이해

1. 부패행위 신고 필요성
2. 내부신고 의의
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필요성

1. 부패행위 신고 필요성

부패행위 신고는 왜 필요할까요?

Chapter.1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제도의 이해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과 청렴사회 구축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사회정의의 실현

건전한 시민의식의 발휘

기존의 외부내부통제가
지닌 한계 극복과 우리
사회의 고질화 된 부패
척결

구조적이고 은밀한 부패를 척결

행정의 책임성 제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

부
패
신
고





부패
신고



외부
신고

조직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부패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

진정한 의미의 시민의식의
발휘

내부
신고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고자 신고하는 행위

사전적·예방적 부패 억제 기능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부패통제 수단

Whistleblowing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음

내부신고

1

부패통제의 용이성 및
비용절감 효과

부패가 은밀화·구조화·지능화됨에 따라 조직의
내부문제를 잘 알 수 있는
내부인의 정보제공이 필요

2

수평적·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 부패통제

타율적 통제는 부패를 더욱 은폐하려는 성향을
갖도록 하므로 내부신고 강조는 이러한
부작용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구성원 누구나 자율적 신고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부패방지 정책

3

국민의 알 권리 신장 및
조직의 윤리적 건전성
제고

외부인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내부의 정보 및 문제점들을 외부에 알림

조직 내 부적절한 의사결정행위에 대한
경고 장치

2. 내부신고 의의

내부신고의 유형

내부 신고자의 신분에 따른 유형

재직형

내부 신고자가 조직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신고하는 유형

이직형

내부 신고자가 재직 중 목격한 조직의 비리를 조직을 떠나면서 신고하는 유형

내부 신고의 대상이나 경로에 따른 유형

내부형

내부 신고자가 조직 내부의 채널을 통해 해당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나 상급책임자에게 보고하는 유형

외부형

내부 신고자가 조직 밖의 의회, 언론, 검·경찰, 시민단체 등에 직접 폭로하는 유형

내부 신고의 방법에 따른 유형

익명형

내부 신고자가 조직 내부의 비리를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관리자나 언론 등에 알리는 방법

공개형

내부 신고자가 기자회견이나 청문회 등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조직의 부패행위를 폭로하는 방법

내부 신고자의 역할에 따른 유형

소극형

법정이나 경찰 진술 과정에서 사실을 증언

완전형

폭로 또는 공개를 마친 형태

적극형

공개적 반대나 항의를 통해 외부에 알리는 형태

불완전형

신고 준비단계로 진위 여부 확인 과정에서 보복을 받게 되는 형태

2. 내부신고 의의

내부신고 활성화 방안



조직내부의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 문화정착**이 필요



내부 신고의 익명성과 신분보장을 위한 **단독 법률의 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



내부 신고자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체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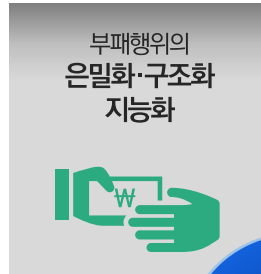


다양한 **내부신고 채널유지**가 필요

3.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필요성

신고자 보호 필요성

내부신고자 필요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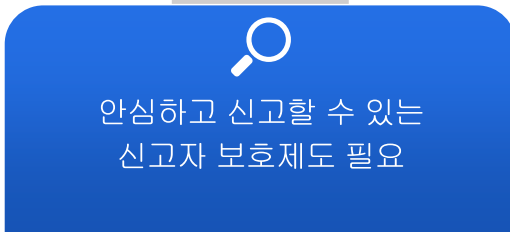
신고 이후 신고자를 보호 필요



부패행위 신고
이전



부패행위 신고
이후



Chapter.2

부패신고 이해 및 신고 · 처리 절차

1. 부패행위 이해

2. 부패행위 신고 및 접수 · 처리 절차

1. 부패행위 이해

부패행위란 무엇일까요?

부패행위의 개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1

공직자가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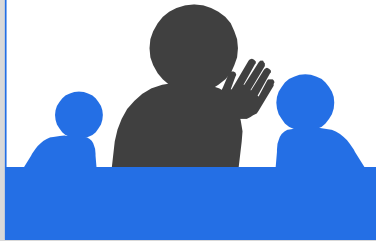
2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
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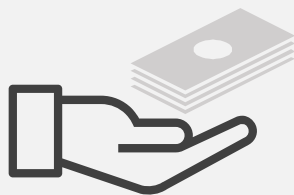


1. 공직자가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사례 1

뇌물 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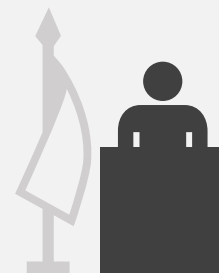
요식업 등 각종 단속 묵인, 건축허가·준공검사, 세금면제, 납품관련 사례비, 토지분할·농지취득 등 관련서류 조작, 공장설립 허가관련 급행료, 산재 보상비 과다책정, 관급공사, 산림훼손 허가, 정부지원금 지원, 시설증축 및 용도변경, 각종 수익계약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사례 2

직권남용

인사기록카드 조작, 거래한도액 초과, 직원을 시켜 계량기 등 조작, 직위를 이용하여 협박 및 금품갈취 등





2.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사례 1

공공기관 납품비리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군수물자를 납품하면서 하도급업체와의 이중 거래명세서 작성 등을 통해 납품원가를 조작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사례 2

건강보험 부정청구

가짜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부정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행위



3.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유인하는 행위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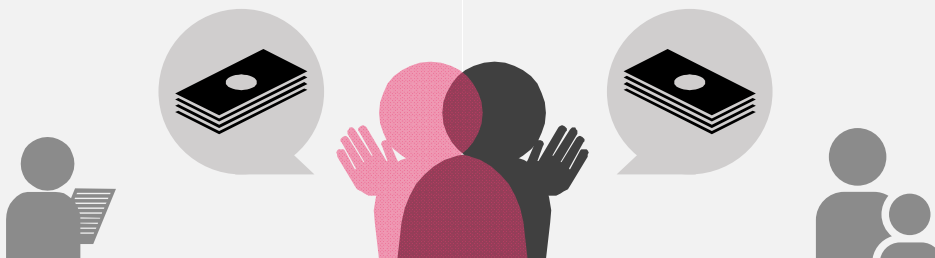
불법적 이익 제안

공무원의 청렴의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데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하였다면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패행위에 해당

사례 2

촌지 명목의 금품 제공

초등학교 담임교사(공무원)가 학생들을 구박하여 그 학부모가 어쩔수 없이 촌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게 강요하였다면 이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



1. 부패행위 이해

부패행위의 유형

A

뇌물, 독직, 강탈

- 뇌물: 공직자가 선택된 민간인에게 일정한 혜택을 베풀고, 민간인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거래의 형태
- 독직: 무상 또는 염가로 제공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하여 추가의 보상을 요구하여 사익을 취하는 것
- 강탈: 뇌물과 반대로 선택적으로 불이익을 줄 것을 위협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얻는 것

B

남용되는 권한

- 행정권에 속하는 인허가, 조세, 조달, 인사, 수사 등 대표적인 부패행위 또는 사적 이익의 유발요인
- 국회의 입법 활동은 활발한 로비의 대상이 되는데 로비의 대상인 재량권이 부패행위의 유발요인
- 사법부의 형사재판권이나 민사재판권도 같은 이유에서 로비의 대상이고 또한 부패행위의 유발요인

C

추구되는 사익

- 뇌물, 강탈, 독직에 의하여 제공되는 우회적인 형태의 이득
- 금품 외의 방식의 보상
- 직무행위의 권한 또는 정보를 이용하여, 공직자의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는 행위

D

훼손되는 공익

- 가격책정의 왜곡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 하가, 시공업체, 납품업체 선정의 왜곡에 따른 물적 자원배분 왜곡
- 인사권의 남용에 따른 인적 자원배분의 왜곡
- 포상과 처벌의 왜곡에 따른 공정성 왜곡

E

조직과·구조화의 정도

- 정경유착: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간의 조직적인 부패행위
- 권력형 부패행위: 조직과 조직간의 유착은 흔히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발생
- 언론 부패행위: 공적 기관의 성격을 갖는 언론기관이 편집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유인
- 의료 부패행위: 전문 처방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병원 또는 개인의 사익을 도모

1. 부패행위 이해

부패행위 발생원인

국가·사회·집단에서나 **인간의 이기심**과 **제도상의 허점**이 존재하고
사회집단의 목적함수(정치인 선거득표 극대화, 기업 이윤 극대화, 정부 예산극대화, 개인 효용극대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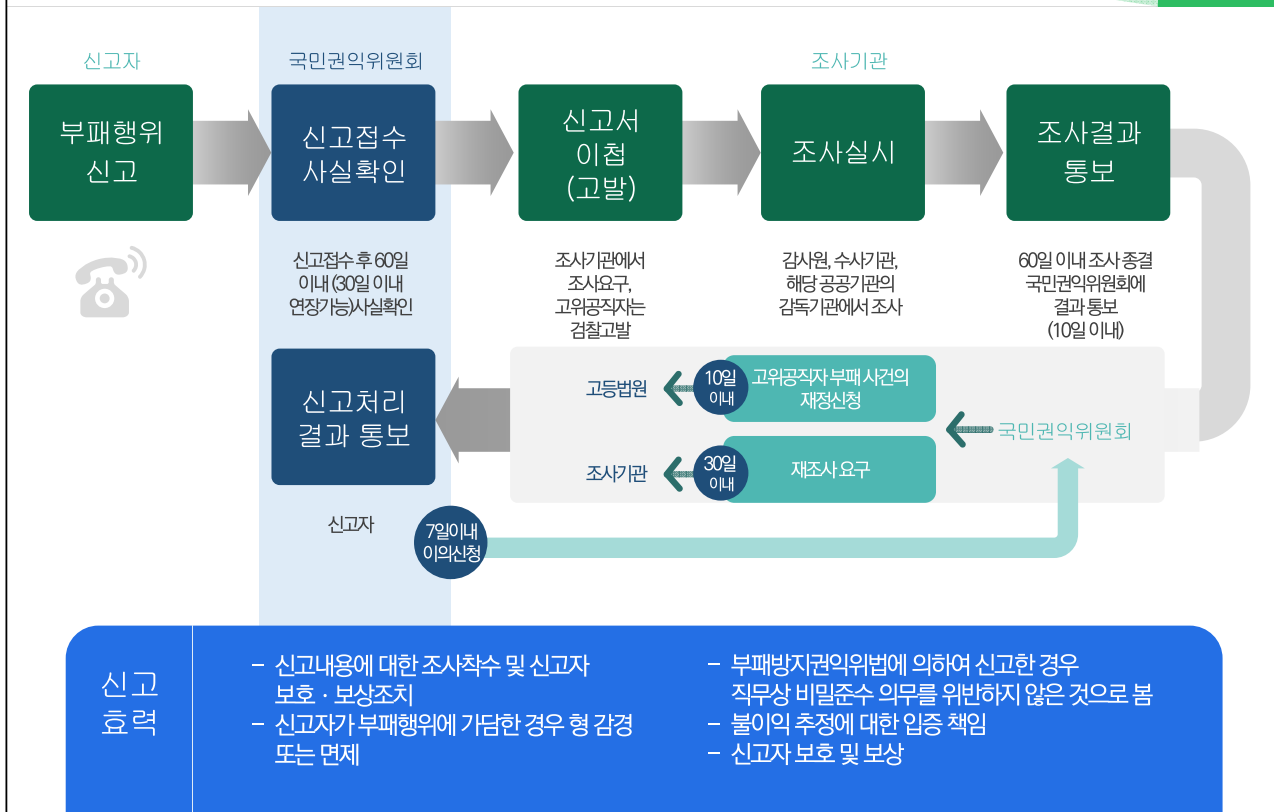
2. 부패행위 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자



2. 부패행위 신고 및 접수·처리 절차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 절차 및 효력





Chapter.3

보호·보상제도 이해

1.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2. 부패신고자 보상·포상제도

1.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체계

Chapter.2
보호·보상
제도 이해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 보호 체계 구축

-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단계에서부터
신고처리과정까지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구축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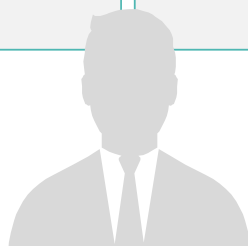
- 신고준비단계에서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할 것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에서 보호하는 신고인 경우 신고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

신변보호 요청

- 신고로 인해 신고자의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요청

그 밖의 보호조치

- 신고로 인해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기타 보호

신분보장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65조



요구인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자 및 협조자

불이익처분 내용

신분상 불이익

- 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등 부당한 인사 조치
- 전보, 직무 마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

- 성과평가 등에서 차별과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경제적 불이익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

행정적 불이익

-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신고자 신분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징계요구 및 과태료 처분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9항, 제91조 제1항
- ✓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1조 제1항 제3호

형사처벌

-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
기타 보호

불이익 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제
2016.9.30 시행



신고자 소속기관 장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자 및 협조자



위원회 결정시까지 신고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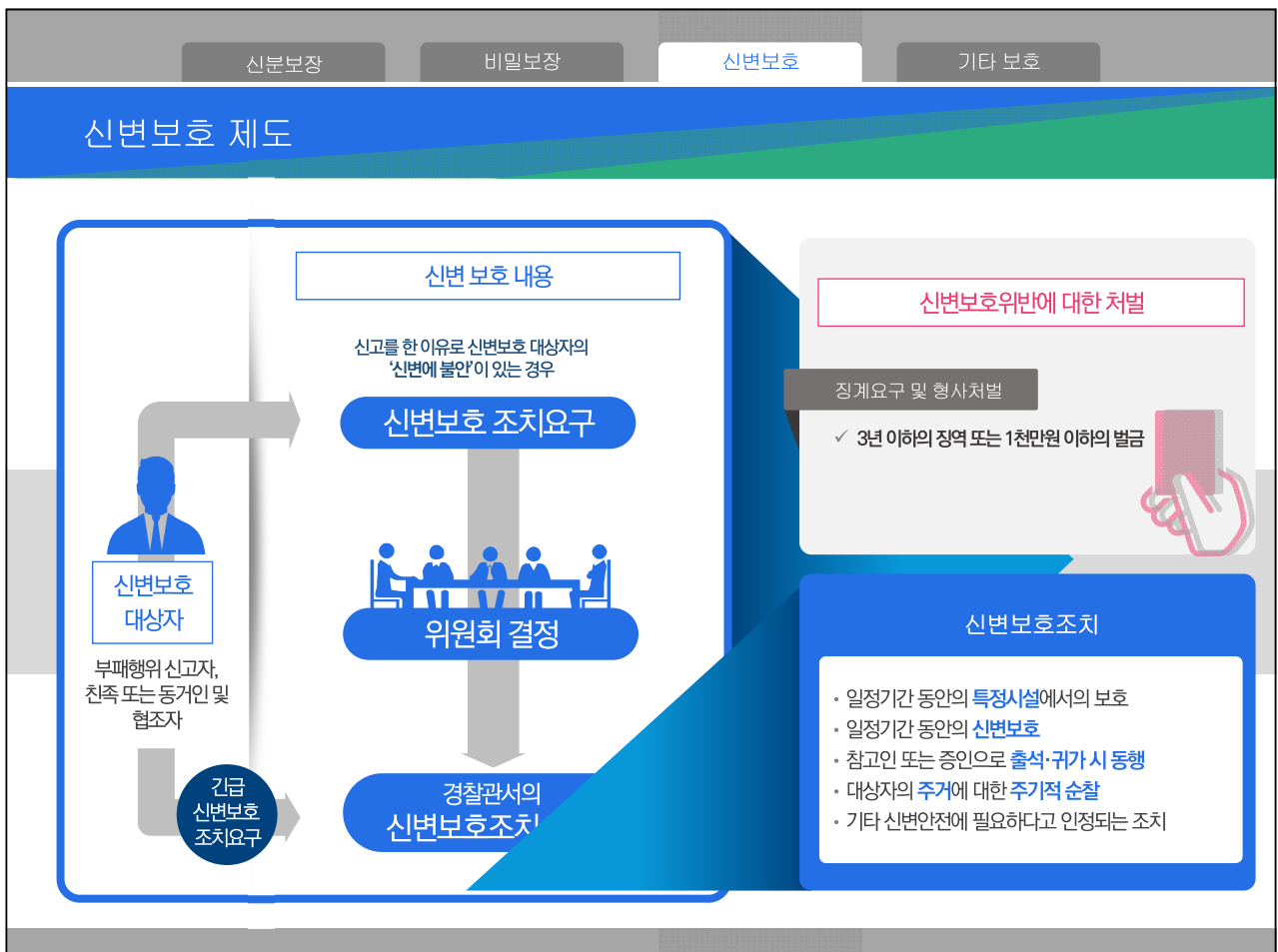
부패신고자

신고자의 소속기관의 장 불이행

형사처벌

-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신변보호 제도

사례 1

긴급 신변보호조치

지자체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공무원들이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신고

파신고자로부터 신체적 위해 및 협박성
발언을 듣고 신고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관할 경찰서에
긴급신변보호조치 요구

사례 2

신변보호조치

지역개발공사 등과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진술 기타의 방법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확인 과정에서 조력

파신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지속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딸이 협박 등 신변상 위험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협조자와 그의 딸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각각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함

기타보호 제도

책임감면(형벌 또는 징계처분의 감면)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배제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부패신고자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시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간주

사례1
책임감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의 뇌물수수 비리 건을 신고

=

소속 기관장 및 상사에게 뇌물을 제공

책임감면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의 형사절차 및 소속기관의
징계절차에서
신고자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음을
해당기관에 안내

부패행위신고자 보상·포상제도의 의의

보상금

공공기관 수입증대 또는 비용을 절감한 경우

**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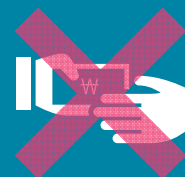
최고 2억원까지 지급
※ 금품수수 자진 신고 시 최고 5억원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신고자의 손해를
보전
신고 활성화에 도움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에 기여

보상금

포상금

신고자 보상금 제도

부패행위신고자 보상금 지급요건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 물수 또는 추징금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에 의한 비용절감 등

※ 벌금, 과징금, 과태료, 통고처분 제외

신청 기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상금 지급 기준

**지급한도액 30억원 내에서
보상대상가액의 4~30% 지급**

※ 2015. 10. 20. 신고부터 적용

**보상금에는 신고자가 입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
치료비, 이사비,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감액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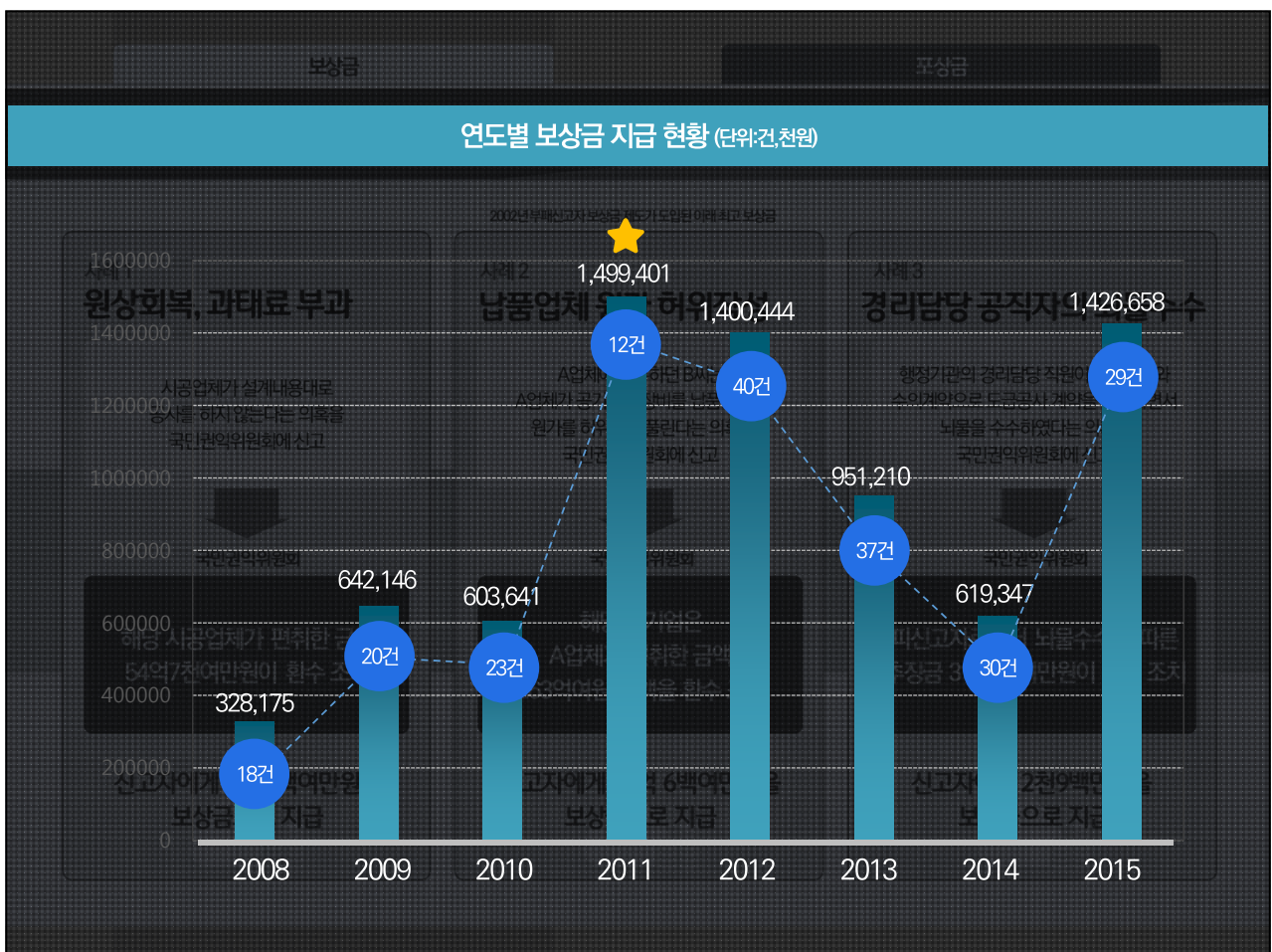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 언론매체에 의하여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 가담 여부
-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지급제한

- ✗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지급 기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결정



신고자 포상금 제도

부패행위신고자 포상금 지급요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

방법1

2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포상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2

5억원 한도 내에서 신고금액의 30% 해당금액 ※ 2015.10.20. 신고부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례

사례 1

대학연구소 시험데이터 조작비리

대학연구소에서 시험데이터 결과를 조작

약효가 미달되는 불량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제약업체의 고질적 비리
근절에 획기적인 역할과
공공의 안전 측면에서
부패방지에 지대한 공헌**

신고자에게 5천만원을 지급



사례 2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 입학비리

고등학교 운동부 감독들이 편·입학 과정에서
자격 미달 학생들을 부정 입학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관련자가 40여명에 이르는
구조적 비리사건
주요 언론에 집중 보도되어
유사비리 예방에 기여**

신고자에게 1천5백만원을 지급





Chapter.4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제도 비교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제도 비교

Chapter.4
부패신고와
공익신고
제도 비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사회적 신뢰저하를 초래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신고란?

누구든지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

부패신고 vs 공익신고

부패행위신고제도

부패행위신고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근거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음

공익신고제도

공익신고제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음

부패행위신고제도와 공익신고제도의 신고처리절차

부패행위신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도모하거나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부패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

공익신고

공적 부문 외에도 사적 부문에서 국민의 안전 및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익신고제도가 운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근거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법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	신고 대상	• 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는 279개 적용 대상 법률의 발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감사원 • 파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그 감독기관	신고 기관	• 공익침해행위 발생기관 및 기업 • 소관 행정·감독기관 및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회의원 • 신고대상법률의 집행 관련 공공단체
• 신분비밀보호 위반자 징계요청(신변보호사실 유출 시 형사처벌) 및 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 보호조치불응자 형사처벌 • 자료제출·진술·조회요구 불응자 과태료부과	제재 수준	• 신분비밀보호 위반자·불이익조치자 징계요구 및 형사처벌 • 보호조치 불응자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 특별보호조치 불응자 과태료, 이행강제금 • 자료제출·출석·진술거부자 과태료부과
• 부패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30억, 최저한도:없음	보상금	•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지자체에 수입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상한액:20억, 최저한도:20만원 *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
• 부패신고로 인해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상한액:2억	포상금	• 공익신고로 인해 재산상 이익이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상한액:2억
• 명시적 규정 없음 (보상금으로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 지급 가능)	구조금	• 공익신고로 인한 치료·이사·정송비용 지출 및 임금 손실 시 구조금 지급
• 규정 없음	보조금 상환	• 지자체 수입회복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자체로부터 상환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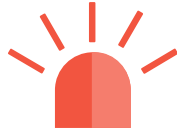
1차재정:2011년01월12일

2차개정:2014년12월12일

3차개정:2014년03월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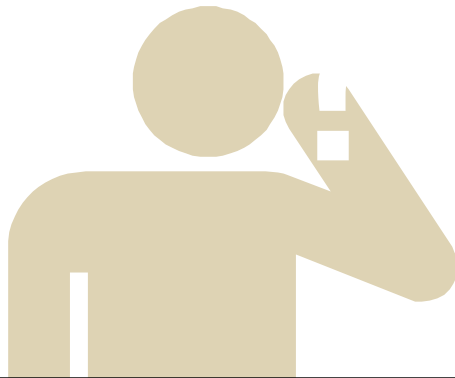
4차개정:2014년11월12일

5차 개정2015년11월12일



Q2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의미합니다

180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



AIDS 감염된
혈액 유통

국민의
안전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환경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
이익



가짜 참기름
유통

공정한
경쟁



LPG
가격 담합

※ 180개 법률: 의료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폐기물관리법, 소비자 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양심
공약신고

1. 건강분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허위표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인체에 유해한
스테로이드제 성분을
넣은 건강기능식품
조제·판매



의료법, 약사법

-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광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



식품위생법

-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유통기한
변조, 및 식품
인증마크 불법사용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양심
공약신고

2. 안전분야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납품하는 행위



건설기술관리법

- 불성실한 책임감리
등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건축사법

-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산업안전보건법

- 사업주가 기계 등
설비의 위험 예방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3. 환경분야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 유독물을 사용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수산자원관리법

- 우연히 잡히거나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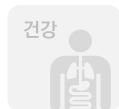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 농약,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4. 소비자이익분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관광진흥법

- 여행계약의 고의위반



소비자기본법

- 물품·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자율을 초과한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



공익침해행위 5대 분야



5. 공정경쟁 분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가격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가격 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법 하도급 거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가맹본부의 부당한 상품공급 중단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공사권을 따내기 위해 미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공익신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How?

- 신고자의 인적 사항, 공익침해행위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후 증거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고 합니다.
-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 익명의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려는 시도나 피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나 신고내용을 알리는 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기재사항 법 제8조 제1항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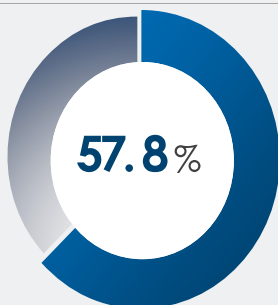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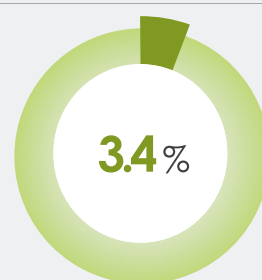
1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공무원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인식의 차이’
54.4%p

일반국민과 공직자의 인식의 차이가 시사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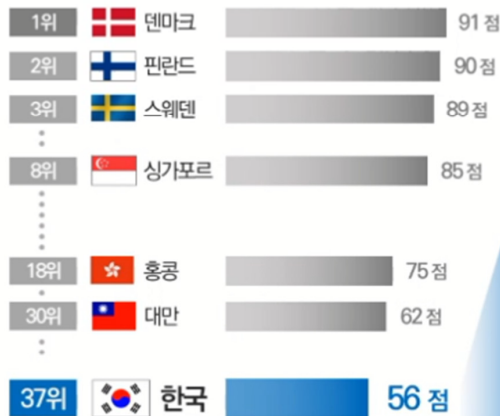
- ▶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 국민들의 시각에서 ‘부패’를 공직자들은 관행으로 여겨 문제의식을 갖지 못함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2

답보상태인 한국의 청렴수준 향상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 출처: 국제 투명성 기구 (TI, '16.1월)



법률 적용대상

적용 대상기관



-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 ✓ (공직자 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 공직자들의 배우자
- ✓ 공무수행사인
- ✓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1 인가·허가 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사유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 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 시 제재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수준 (※ 위법행위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여 발착과 징계 병과)

위반행위	제재수준
직접 부정청탁을 한 자	제재 없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1 천 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일반인 2 천 만원 이하 과태료 공직자 등 3 천 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 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 금지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 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금품 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 등

‘금품 등’의 정의

금전,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유가증권·상품권 2018.01.17 제외)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1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4 공직자 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6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김영란법 허용 상한선 개정

	기존	개정
 식사대접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원	3만원
 선물 금전, 음식물 제외한 일체의 물품	5만원	5만원 (10만원*)
 경조사비 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10만원	5만원 (10만원**)

*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

** 현금 상한선은 5만원이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
 현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

“ 주요국가 선물수수 금지 규정 ”

미국		1회 20달러(약 2만원), 연간 50달러(약 5만원) 초과 선물수수 금지
영국		25파운드~30파운드(약 4~5만원) 초과 선물수수 금지
일본		5000엔(약 5만원) 이상 선물수수 시 신고의무
싱가포르		50싱가포르달러(약 4만원) 초과 선물수수 금지
		

